

특별기고

박종문



‘결혼은 하는 즉시 후회한다. 그러나 안 하면 더 후회한다’는 말이 있다. 이런 상황을 노려낸 시가 바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이 아닐까.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의 발자취가 적은 길을 택했다.” 대부분 확장시설에 한번쯤 읊조려보았을 이 시 구절은 인간이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없으므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선택은 늘 고통스럽다.

F1대회도 그러한 경우일 것이다. 사람의 발자취가 적은 길을 택한다면 국내에서는 F1대회가 매력적인 수밖에 없다. 다만 ‘왜 전남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도 높고, 잘사는 지역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할 것인가? 그런 논리라면 자치단체간 경쟁에서도 ‘감자의 독식’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또 이러한 논리로 일을 벌이지 못하게 한다면 역력이 없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소위 백년하청(百年河淸), 즉 백년을 기다려도 황하의 물이 맑아질 수 없다는 말처럼 낙후지역에서 경제를 키우는 일은 한낱 꿈

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제대회는 정부 주도로 유치했다면 지방자치체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작년에 와서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해 나가야 할

가지 않은 길과 F1 그랑프리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남도가 유치한 F1대회는 지방자치에 부합한 새로운 도전이며, 정부에서도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목포지역은 영암시킴에서 개최되는 주말 모터스포츠 행사로 인해 평화광장 주변 상가와 호텔 등에는 예전과 달리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개최권료 등 고비용이 드는 F1대회에 최근들어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올해의 경우 인도가 신규로 참여했고, 미

국은 내년에 참가한다. 그리고 러시아가 2014년에 진입하기로 결정되었고, 최근에는 홍콩·프랑스·크로아티아도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특히 크로아티아는 서킷을 건설 중에 있는데 F1대회 유치 배경이 바로 국가브랜드 강화와 관광산업 확충이다. 크로아티아는 유교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세계인들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F1에 뛰어드는 국가의 경우, 국가 브랜드 향상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감안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호주 멜버른 대회 F1 운영본부장은 “적자를 메우기도 힘들었지만 멜버른을 알리는 가장 큰 기회 중에 하나에 기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정부에서 대회 지원금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지만 대회 개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텍사스 정부가 오스틴 그랑프리 서킷 프로젝트를 위해 매년(10년 동안) 2500만 달러를 지원키로 약속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F1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파격적

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F1대회가 스포츠 차원을 넘어 도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인프라로 볼 필요가 있다. F1대회가 단순히 ‘적자’를 낸다는 이야기에 앞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따질 필요도 있다. F1대회가 현존 최고의 모터스포츠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지원도 필요하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국가관광청이, 중국·말레이시아·바레인·UAE는 국영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인도는 국가 올림픽위원회에서 주관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세계 188개국에서 연간 6억명이 시청하는 메르데급 모터스포츠 대회에 대한 한국민의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세계 자동차 메이저 생산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모터스포츠는 도외시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제는 정부와 자동차제조사에서도 함께 나서서 ‘모터스포츠’ 산업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F1대회가 성공하면 국가브랜드 가치도 올라간다. 그러면 관광객도 늘고 경제도 살아난다. F1대회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걸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의 마지막 연으로 결어를 대신한다. <F1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시설

민주당, 또 호남 소홀엔 혹독한 대가치를 짓

민주당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19일 열린 민주당과 양사·도 간 정책간담회에서 김진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보에 당 차원의 협조를 약속한 것이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민의 민주당 사랑은 ‘일편단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갖은 오해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40년 동안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전폭 지지해 온 게 당연한 사실이다. 오죽하면 “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 허수아비를 내세워도 당선”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심은 한 마디로 ‘짜사랑은 이제 그만’이다. 선거 때와 선거 후 너무 다른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지역민들이 이제 신물이 난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호남이 현정 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민주당의 롤 한 단계 끌어올린 국민의 정

부와 참여 정부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자긍심으로 불만을 삭여 왔다. 그러나 그인내에 한계가 온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주요 현안사업마다 타지역 눈치를 보며 호남을 외면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선정이다. 호남고속철, 전라선 고속화 추진, J프로젝트, 여수박람회 등 지역현안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관심과 노력은 기대 밖이었다. ‘야당이기에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은 변명엔 불과하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10년 동안 광주·전남을 위해 해준 게 무엇인가. 민주당은 이번 광주시와 전남도 정책간담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올 9월 정기국회에서의 민주당 행태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또다시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전철을 되풀이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황주홍 군수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

장학기금 불법 조성 혐의를 받은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해 경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광주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전남경찰청의 내사종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 논란까지 휩싸이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광주지검 특수부가 18일 황 군수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유만 보더라도 경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검찰은 다른 자치단체 장학재단 운영사례를 검토한 결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강진 장학재단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고, 황 군수가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군 발전을 위해 재단 운영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경찰이 적용한 뇌물수수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이 9개월여에 걸쳐 2차례나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이고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낭패를 본 것이다. 장기간의 수사력 소모와 함께 강진군의 행정력 낭비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경찰의 책임은 불가피하다. 1년여 동안 경찰과 감사원에 발목이 묶여 군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식의 후진국 수사관행이 여전하다는 얘기가. 이렇고도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외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무리한 수사의 바탕엔 실적주의와 성과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의 성과 우선주의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구잡이 실적주의가 난무하다 보니 예방치안에 구멍이 송송 뚫리는 게 아닌가. 검찰이 경찰의 수사개시권 인정에 대해 남용이나 악용 가능성이 크며 내사 단계에서부터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음부즈맨 칼럼



김현석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은 매년 여름의 불청객이다. 근년에는 국지성호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귀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다. 바로 ‘인재(人災)’라는 단어다. 하늘의 조화에 대해 사람의 능력으로선 대처할 방법이 없는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간이 대비를 게을리해 생긴 무비유환(無備有患)이라는 것이다. 피해 주민과 관계당국은 ‘인재’나 ‘천재’냐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인다. 한편으로 당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긴급복구를

시작하지만, 대개는 공사가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다음 여름을 맞이한다. 지난여름의 사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책임자는 사람 없이 대부분 유아무야 끝나고 만다. 올 여름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도 서울에서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대문 감남은 도로가 침수되어 그야말로 수도(水都)가 되는 여허구니 없는 상황도 전개되었다. 특히 우면산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유사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도 행정당국의 충분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아 불행한 사태가 재발했다는 시기가 많다. 더구나 산사태 전문 토목공학자들의 수차례 걸친 위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자체장들은 몇 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말하려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방재 시설 구축은 탄산이 안 맞는 예산 집행쯤으

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다음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가시적 인 효과 있는 도로나 교량의 건설 등에 예산 배정과 집행의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인재를 넘어 관재(官災)라는 표현까지도 회자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광주일보 8월 9일자 사실에서도 지적한대로 “기상이변은 이제 이변이 아니다.” 환경과기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지구적인 재앙은 이제 거의 일상적인 일 이 되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방에서도 이번 여름 제9호 태풍 무이파로 농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서남단 가거도에서는 개당 64톤이나 되는 방파제 주변의 테트라포드 200여 개가 강풍에 휩쓸려가기도 했다. 입추도 이미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절기

인재(人災)와 천재(天災) 사이

상으로 처서이지만 밤심은 글뿔이다. 통상적으로 태풍은 매년 8~9월에 10여 개가 발생한다. 그중 순간 최대풍속 50m/s를 넘는 슈퍼태풍의 상당수는 9월에 한반도를 강타한다. 기상관측사에 길이 남을 1959년의 태풍 ‘사라’가 그러하며, 2000년대의 ‘매미’, ‘나리’, ‘나비’, ‘곤파스’ 등도 모두 9월에 찾아왔다. 따라서 여름이 물러간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 것이다. 게다가 여름은 내년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사전에 막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광주일보 8월 3일자에서는 ‘문화의 전당 집중호우 못 버티다’라는 제목의 시의적절 한 기사가 1면 톱으로 게재된 바 있다. 그러나 건설 중인 ‘문화의 전당’만이 침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차제에 우리 지역의 재해 위험요인을 총체적으로 취재하여, 관계당국의 대비책을 점검하는 유비무환의 기획기사를 제안한다. ‘인재’나 ‘천재’냐를 놓고 벌이는 후진국형 논쟁이 우리 지역에서부터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본보 독자위원·광주대 일본어학과 교수>

법조칼럼



이재석

뉴욕 메디슨 공원에서 잠을 청하는 날이 많은 소피는 날이 추워지자 교도소가 있는 섬으로의 도피를 꿈꾸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레스토랑에서 무전취식을 시도해 보지만 입구에서부터 쫓겨나고 배를 먹고 나서

경찰을 부르라고 해도 종업원으로부터 실컷 얻어맞기만 한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여자를 희롱해봐도, 상대방을 이를 받기는 거리의 여자이다. 고심 끝에 우산을 훔쳐보지만, 자신도 뒤가 구린 사내는 우산을 우연히 주겠다고 사과할 뿐이다. (오렌지 단편소설 ‘경관과 찬송가’ 중) 재판을 하다보면 가끔 또 다른 ‘소피’를 만나게 된다.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느라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재범에 이르는 이들도 있지만,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이라는 악순환의 굴레에 내맡긴 경우도 본다. 그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빠르게

살아보려 했지만 어쩌다보니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반성의 글을 적어내며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이러저러한 음순인 경우가 많지만, 그 말 속에 진심 한 자리가 묻어나기도 한다. 미망(迷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중생이지만 알맞은 운명의 땀으로 물리는데만 그칠 수 있을까. 소설 속에서 소피는 공원으로 발길을 돌린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에 문득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고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당당히 맞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게 체포되어 그토록 원하던 섬에 가게 된다. 그 자신이 수감생활을 경험했던

작가는 소설에서 인생의 아이러니를 담아보려 했으리라. 분명 현실 속의 또다른 ‘소피’들에게도 잠깐씩이라도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회심(回心)의 순간이 찾아왔을 터이다. 그랬다가 운명의 무게에 눌려, 힘겹게 갈듯해 보다가 아니면 그런 시도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또다시 자신의 운명과 손쉽게 타협해 버린 것은 아닌지. 물론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치 않다. 실업, 경제불안, 양극화, 신용불량, 가정해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이들이, 더구나 전과자라는 명에까지 짊어지고 있다면, 현명하고도 용기있게 대처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터이다. 함께 살아가야 할 이들이 에워 붙잡고 있는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한 때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소피’들의 올바른 선택을 응원하고 도울 일이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공계 장학생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땐 장학금 환수해야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이공계 국가 장학생 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이 기피하는 이공계를 되살리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장학생의 상당수가 졸업 후 의사가 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하고 있어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 대학에서 4년 내내 이공계 국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졸업 후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성취나 출

세를 위해 의사가 되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장학금이 허공에 날아가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공계 장학금의 1년 예산은 전국적으로 7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거액을 들여서까지 장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을 시켜주는 이유는 국가 과학기술의 퇴보를 막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공계 기초 분야 연구보다는 당장 졸업 후 의사가 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다면 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제적인 의무 조항, 즉 이공계 연구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장학금을 환수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남상민·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3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